현장과 시각

공천 성패 물갈이에 달렸다

홍행기
정치부 차장

통합민주당이 18대 국회의원 후보 확정의 전단계로 9일과 10일, 광주·전남 예비후보들을 2~4배수로 압축하고 지역구별 여론조사에 들어가자 명단에서 제외된 후보들은 패닉상태에 빠져들었다.

명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후보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공천심사위원회에 항의하기 위해 일제히 중앙당으로 달려갔으며, 또 다른 후보는 사무실을 정리한 뒤 핸드폰 전원을 끄고 잠적해버리는 등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비교적 소식이 '늦은' 일부 후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언론에 보도자료를 돌리며 표밭을 다지거나, 뒤늦게 눈치를 채고 명단을 확인하려 애쓰는 '안쓰러운' 장면도 연출됐다.

명단에서 제외된 한 후보는 "도대체 기준이 뭐냐. 내가 왜 빠진 거냐"며 황당해 했으며, 또 다른 후보는 "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공심위를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명단을 본 시민들은 대부분 "현역의원이 죄다 포함됐다는 점을 제외하면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이 포함된 것 같다"며 공심위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후보는 공천에서 제외한다'는 공천기준이 발표된 후부터 지역 정치권에서도 "호남지역 공천에서 피바람이 불겠구나"라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 진행될 최종 후보 선정 과정 역시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도 엿보였다.

그런 만큼 지역민들은 이번 명단에 현역의원들이 포함되는 데 대해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호남지역 현역의원 30%가 공천심사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원칙이며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공심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준 미달 현역의원을 물갈이하려는 의지가 흐려진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DJ의 최측근인 박지원 씨와 DJ의 차남 김홍업 씨도 공천심사에서 배제된 만큼 물갈이 대상 현역의원에 대한 기준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왕에 '공천개혁'을 한다고 했고, 또 일부 거물급 인사도 공심위의 기준에 맞춰 공천에서 배제한 만큼,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도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개혁공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번 4·9총선은, 적어도 호남에서는 '공천장이 곧 당선증'이라는 공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실제 투표에 나설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얘기고, 또 그만큼 당의 공천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공천혁명의 첫걸음은 현역의원 물갈이에서 시작한다. 기득권이나 학연·지연에 휘둘리지 않는, 흔들림없는 공천개혁을 기대한다.

/redplane@kwangju.co.kr

'e삼성' 피고발 삼성 전·현 임원

기소 여부 26일까지 결정

삼성특검 오늘 김용철 소환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연관된 4건의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e삼성' 사건의 핵심 피고발인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오는 26일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e삼성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구조조정본부를 주축으로 한 그룹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뛰어든 인터넷 사업인 'e삼성' 운영과 관련, 2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자 2001년 7월 27일~29일 제일기획 등 8개 계열사가 e삼성 지분을 매입해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으로, 주요 임원들이 고발당한 사건이다.

특검팀은 계열사들이 e삼성 지분을 매입해 결과적으로 이 전무의 '경영 실패'를 보전해 주는 대신 계열사에 손실을 끼쳤는지, 그룹 차원의 공모·지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7일로 완성되기 때문에 늦어도 26일까지 이씨 등 핵심 피고발인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삼성 지분을 매입한 제일기획·에스원·삼성SDS·삼성SDI·삼성전기·삼성카드·삼성증권·삼성캐피탈·삼성벤처투자 등 계열사 9곳의 전·현직 임원 62명이 이 사건으로 고발돼 있다.

e삼성 사건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다.

배임으로 취득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산출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이다.

윤정석 특검보는 "일단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를 7년이라고 본다면 공소시효(26일) 전에는 최종 결정이 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비자금 조성·관리 의혹과 관련해 삼성화재 관계자 1명을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또 김용철 변호사를 11일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삼성이 정.관계와 법조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떡값 로비' 의혹에 관해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한편, 노회찬 진보신당 의원 등 진보신당 관계자 10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특검 사무실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1차 수사는 '무능·늑장·부실 수사'라며 이건희 회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힐러리 "대반전 이제 시작이다"

필패론 제기 등 '타도 오바마' 새전략 수립

힐러리의 대반전이 시작되나.

지난주 '미니 슈퍼 화요일' 대결에서 승리, 기사회생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경쟁자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을 물리치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지명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힐러리 의원의 전략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승리를 거두고, 경선을 앞당겨 실시하는 바람에 경선 결과가 무효가 됐던 플로리다와 미시간주의 대의원을 확보하는 한편 오바마가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오바마 필패론'을 부각시키는 것이 힐러리 의원측의 전략이다. 현재 오바마는 힐러리에 60만표 가량 앞서 있다. 그러나 만약 플로리다주와 미시간주의 득표를 포함할 경우 힐러리가 오바마에 3만표 가량 앞서게 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무효화된 플로리다와 미시간주의 프라이머리를 다시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주 힐러리 캠프의 인사들과 만나 플로리다와 미시간주의 예비선거 재실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하이오주에서 압승한 힐러리 의원은 펜실베이니아주 경선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다음달 22일 실시되는 펜실베이니아주 경선에서 승리하면 득표에서 오바마를 앞서게 돼 슈퍼대의원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게 힐러리 의원측의 계산이다.

'오바마 때리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힐러리 의원은 최근 오바마가 이슬람교도라는 루머를 부인하면서도 "내가 아는한"이라고 단서를 달기도 했다. 오바마를 지지하고 있는 빌 브래들리 전 상원의원은 힐러리 의원이 이기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본선 상대가 될 수 있는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가 유리해지더라도 오바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힐러리가 수단과 방법을 안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가 9일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인 국민당을 누르고 승리한 뒤 마드리드의 선거본부에서 부인과 포옹하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페인 총선 집권당 승리 사파테로 총리 재선

9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사회노동당(PSOE)이 예상대로 야당인 국민당(PP)을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

AFP,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투표가 끝난 뒤 92%의 개표율을 보인 밤 11시30분(한국시간 10일 오전 7시30분) 현재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47) 총리를 내세운 사회노동당이 43.8%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마리아노 라조이(52) 당수를 새 총리 후보로 내세운 중도 우파 야당인 국민당은 40.1%를 득표하는데 그쳤다고 내무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노동당은 하원의석 350석 중 168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국민당은 154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에서는 사회노동당이 164석, 국민당이 148석을 각각 얻었었다.

90% 이상의 개표율을 보이면서 승패가 갈리자 재선에 성공한 사파테로 총리는 당사 밖에서 지지자들을 향한 연설을 통해 선거승리를 확인한 뒤 "스페인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택했다"면서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반면 국민당은 패배를 인정하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사회당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북부 바스크 지역에서 사회노동당 소속의 전직 시의원이 총격을 받고 사망해 긴장이 고조됐으나 대형 테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총격사건이 터진 후 즉각 선거 운동이 중단됐으며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회의가 의회 의사당에서 소집됐으나 정작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공적개발원조 중동·阿 자원부국 집중

외교부, 새정부 자원·에너지 외교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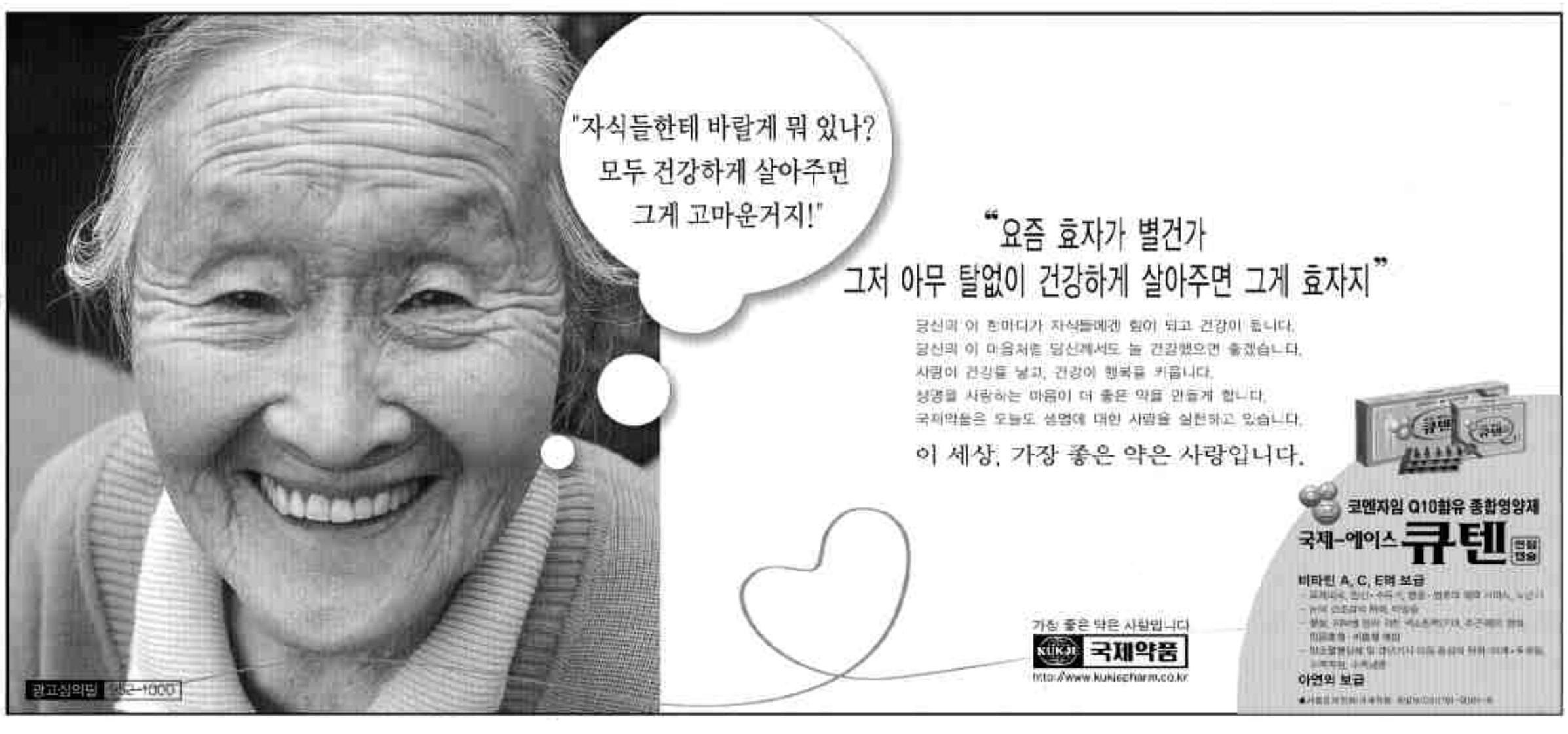
외교통상부가 공적개발원조(ODA)와 문화외교를 중동과 아프리카 등의 자원부국(富國)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자원·에너지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하나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ODA 집행을 통해 자원외교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월에도 자원외교 강화를 위해 ODA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아시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중동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 대한 ODA집행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또 문화외교도 실질적인 성과가 수반돼야 한다는 기조아래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우선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자원외교를 강화하다보면 해당 국가로부터 '자원만 빼가려한다'는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쉽다"면서 "적절한 문화외교가 수반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에서 한국영화제를 열거나 해당국가의 유학생을 초청하는 등 비(非) 경제적인 방식으로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아울러 에너지 외교를 위해 장관 직속으로 에너지·자원대사를 신설하고 국제경제국 산하에도 에너지자원협력과를 새로 만드는 등 자원외교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할 ODA와 문화외교가 실용외교 원칙에 따라 자원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